

# 아베 총리 방중 이후 중-일 경제관계의 변화<sup>1)</sup>

## 1. 개요

- 중국 원자바오(溫家寶)총리 요청에 의한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2006. 10. 8~9)은 그 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중-일 관계를 개선할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킴.
- 아베 총리 취임이전 5년간 중-일 관계는 고이즈미 전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등의 문제로 양국 고위급 상호방문이 중단되며 난항에 빠짐.
- 이 기간은 1972년 수교 이후 양국간 정치는 물론 경제적 관계도 가장 소원하였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이번 아베 총리의 방중은 “파빙지려(破冰之旅 화해를 위한 여행)”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은 취임(2006. 9) 이후 첫 번째 공식 순방이며 일본 정상으로서는 5년 만에 처음임.

1) 본 자료는 상무부 국제경제무역협작연구원 쉬창원(徐長文) 주임이 2007년 2월 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 주최 한·중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일본 아베 수상의 중국 방문과 중일 경제무역 관계>와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임.

## 2. 중-일 경제관계의 특징: 아베 총리 취임 이전

### 가. 중국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 감소

□ 중국 해관통계에 의하면 중-일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1년 877.5억 달러에서 2006년 2,073.6억 달러로 2배 이상 성장(6년 동안 연평균 17% 성장)하였으나, 중국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 중국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은 2001년 17.2%에서 2006년 11.8%로 감소
- 일본은 11년 동안 중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었으나 2004년부터 EU, 미국의 뒤를 이어 제 3위의 교역상대국으로 그 지위가 하락

<표 1> 중-일 교역규모 변화(2001~2006년)

(단위: 억 달러, %)

	對日 무역(중국측 통계)			對中 무역(일본측 통계)		
	중일무역	증가율	중국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중무역	증가율	일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1	877.5	5.5	17.2	892.0	4.0	11.8
2002	1,019.1	16.1	16.4	1,015.6	13.9	13.5
2003	1,335.7	30.1	15.7	1,324.1	30.4	15.6
2004	1,678.9	25.7	14.5	1,680.5	26.9	16.5
2005	1,844.4	9.9	13.0	1,893.9	12.7	17.0
2006	2,073.6	12.5	11.8	992.2(1~6월)	9.9	16.8

자료: 1) 중국 《해관통계》

2) 일본무역진흥기구 《2006년1~6월 일중무역》

- 그러나 일본 측 통계에 의하면 중-일 교역이 일본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중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약화되는 추세를 보여줌.

- 지리적 인접성, 높은 경제적 상호 보완성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일(對日) 교역비중이 감소한 것은 정치적 관계악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됨.

## 나. 중-일 교역의 더딘 성장속도

- 최근 6년 동안(2001~2006년) 중국과 EU, 미국, 한국과의 교역 성장세에 비해 중-일 교역 성장속도가 상당히 낮음.
  - 동기간 중-EU, 중-미, 중-한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25%, 24%, 27%를 기록한 반면 중-일 교역은 연평균 16.6%에 그침.
  - 특히 2005년 중국과 EU, 미국, 아세안, 한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증가율이 모두 22%이상을 기록하였으나 일본과의 교역 증가율은 9.9%에 지나지 않았음.
  - 또한 2006년에도 중국의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교역 증가율이 20%의 수준을 보였지만 일본과의 교역 증가율은 12.5%를 기록

<표 2> 중국의 미국, EU, 한국에 대한 교역규모 비교

(단위: 억 달러, %)

	중-미 교역			한-중 교역			중-EU 교역		
	규모	증가율	비중	규모	증가율	비중	규모	증가율	비중
2001	804.8	8.1	15.8	359.1	4.1	7.0	766.2	11.0	15.0
2002	972.0	20.8	15.7	440.7	22.7	7.1	867.5	13.2	14.0
2003	1,263.3	30.0	14.8	632.3	43.5	7.4	1,252.2	44.4	14.7
2004	1,696.3	34.3	14.7	900.7	42.5	7.8	1,772.9	33.6	15.4
2005	2,163.3	24.8	14.9	1,119.3	24.3	7.9	2,173.1	22.6	15.3
2006	2,626.8	24.2	14.9	1,343.1	20.0	7.6	2,723.0	25.3	15.5

비중: 양자 무역규모가 중국 총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출처: 중국 《해관통계》

- 중-일 교역성장은 중-한 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남.

-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양국 교역규모는 50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성장에 인 해 14년만인 2006년에 1,300억 달러에 도달.
- 이에 비해 중-일 교역규모는 1978년 50억 달러에서 2003년 1,300억 달러를 기록하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됨.

#### 다. 일본의 대중(對中) 직접투자: 한국과의 비교

- 2006년 말까지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 누적 건수는 35,391건, 실행액은 579.5억 달러로서 최근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는 중국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약 10%(실행액 기준)를 차지함.
-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2001년부터 건수와 계약액에서 일본을 앞섰으며, 실행액의 경우에도 2004년에는 62.5억 달러로 일본(54.5억 달러)보다 높았음.
- 이는 한국 대기업의 대중 투자 성장에 따라 한국의 중소기업과 부품기업도 중국에 투자하기 시작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한데 기인함.
- 2005년과 2006년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 건수와 계약액은 여전히 일본보다 많았으나 실행액은 오히려 낮은 수준임.

<표 3> 한국, 일본 양국의 대중 직접투자 비교

(단위: 억 달러)

	한국의 對中 투자			일본의 對中 투자		
	건 수	계약액	실행액	건 수	계약액	실행액
2001	2,909	34.9	21.5	2,003	53.5	45.8
2002	4,008	52.8	27.2	2,745	53.0	41.9
2003	4,920	91.8	44.9	3,254	79.6	50.5
2004	5,625	139.1	62.5	3,454	91.6	54.5
2005	6,115	197.6	51.8	3,269	119.2	65.3
2006	4,262	-	39.0	2,590	-	46.0

자료: 중국 상무부 통계

## 라. 일본의 대중 정부개발원조(ODA)

-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일본은 중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 최대 공여국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일본의 대중 ODA 공여금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06년 6월까지 일본정부가 중국에 약속한 차관은 3 조 여 엔으로서 242개의 프로젝트 건설에 이용됨.
- 일본이 제공한 ODA는 중국의 인프라시설 건설, 외자유치, 경제발전 가속화, 국민 생활수준 제고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1990년대 초 매년 약 2,000 억 엔에 달하던 ODA규모가 2000년대 들어서는 매년 몇 백 억 엔대로 감소되었음.

## 3. 중-일 경제관계 변화 조짐: 아베 총리 방중 이후

### 가. 아베 총리의 방중 성과

- 아베 총리는 방중 기간(2006. 10.8~9) 중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우방궈(吳邦國)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총리와 각각 우호적인 회담을 갖고 교역, 투자,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다차원 교류와 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함.
- 이번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은 그동안 정치적 문제에서 비롯된 갈등관계를 개선하고 이후 양국 고위급간 활발한 교류확대의 물꼬를 텃다는데 그 의미가 있음.
- 이는 중-일 양국간 ‘전략적 호혜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표 4> 아베 총리 방중 이후 중-일 주요 교류

일시	내용
2006. 11(베트남 하노이)	· APEC 정상회담: 후진타오(胡錦濤)주석과 아베 총리, 중국 상무부 췌시라이(薄熙來)부장과 일본 경제산업 아마리아키라 대신간 회담
2006. 11.28(오사카)	· 중국 화동 수출입 상품교역회 개최
2006. 12.9(필리핀 세부)	· 한중일 경제무역 장관회의: 3국간 투자협약의 시작 선포 건의
2006. 12.25~26	· 중국 후진타오(胡錦濤)주석, 우방궈(吳邦國)위원장, 정칭홍(曾慶紅)부주석 등이 각각 일본 국제무역촉진협회 회장, 일본 중의원 의장 고노요헤이 접견
2007. 1.14(필리핀 세부)	· 제7차 한중일 정상회담: 원자바오(溫家寶)총리와 아베 총리는 양국 고위급 상호 방문, 전략대화 강화, 경제무역 대화채널 완비,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 가속화, 국방 교류 강화 등에 공동인식 · 아베 총리, 원자바오(溫家寶)총리의 일본 방문(금년 봄) 요청

#### 나. 발전적 경제관계 변화

- 중-일 양국 정치관계의 개선은 향후 양자간 경제관계 강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이는 양국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
- 교역확대는 완만한 반면 중국의 대일 수입(일본의 대중 수출)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의 대일 수입은 연평균 20%를 웃도는 증가율을 기록
- 일본의 통계에 의하면 2006년 1~10월 일본의 대중 수출(홍콩 제외)은 전년 동기대비 23.1% 증가함으로써 일본 전체 수출 증가율(15.5%)보다 높음.
- 일본의 대중 수출 확대는 일본의 경제성장 회복과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 및 ODA, 기술이전 등은 중국의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
- 현재 중국경제는 고성장 추세에 있으며 일본의 대중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중-일 경제의 발전과 회복 전망,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로 인해 향후 양국 경제관계는 보다 강화될 여지가 큼.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양국 경제관계에 직면한 문제들을 상호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함.

## 다. 중-일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일본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 일본이 도입(2006.5.29)한 “농산물 잔류농약 등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는 15가지의 사용 금지 농업화학품을 규정하고, 농약, 사료첨가물,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총 54,782개의 잔류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이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조치는 아니나, 이전에 비해 잔류기준이 강화되었고 검사 설비와 인원부족으로 인해 검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중국의 농산물 대일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 □ 일본의 대중 수출 제품 품질 문제

- 최근 일본의 대중 수출품 중 일부 품목의 품질문제가 발생했음.
- 예를 들어 일본 SK-II 화장품이 그 품질에서 문제가 발견된 이후 한때 중국내 판매중단과 반품사태를 빚기도 한 사례와 같이 수출품의 품질 문제는 교역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

### □ 일본의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승인 문제

- 현재 한국을 포함한 65개국이 이미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승인하였으나 중국의 중요한 대외 교역상대국의 하나인 일본은 아직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일본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기간이 짧다는 점과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시장경제지위 승인을 미루고 있는데 이는 양국 경제교역의 순조로운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임.

#### □ 중국 시장 대체 가능성

- 일본의 일부 언론과 전문가 사이에 중국경제의 리스크 확대를 지적하며 인도, 베트남 등 여타 아시아 지역에서 한 국가를 선택해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중국+1’)을 제기함.
-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 아직 중국보다 우월한 시장을 가진 나라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임.
- 베트남의 경우 노동비용 측면에서 제조업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으나 현지 법률 및 제도 등 투자환경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비해 숙련공이 부족하며 정세불안, 파업, 투명성 부족 등으로 인해 외자기업의 영업활동에 불리하다는 평가도 있음.
- 인도는 10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GDP규모가 중국의 절반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경제성장 속도도 중국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사회안정이나 인프라 측면 등의 투자환경이 아직은 중국에 비해 떨어진다고 봄.

#### □ 일본의 중-일 FTA에 대한 인식

- 중-일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상호 보완성 등을 감안할 때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기 때문에 양국 FTA 구축은 경제관계의 강화를 촉진할 것임.
- 최근 일본 내각부의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과의 FTA 경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의 FTA 추진 계획에서 중국이 우선순위에 밀려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임.

## 〈질의 · 응답〉

질문 1: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이 타국 기업에 비해 갖고 있는 상대적인 장점과 단점은?

답변 1:

우선 일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기술축적이 높은 대중 투자를 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지방정부 지원, 식수사업 등 사회공익사업도 활발한 편임. 또한 30,000여개에 이르는 일본 투자기업은 중국의 취업기회 확대에도 공헌하고 있는바, 일본기업에 직접 취업한 인력만 약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일본기업은 경영관리 측면에서도 중국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

다만 일부 일본 중소기업들의 경우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폭이 좁아 현지 노동자들과 갈등관계를 빚기도 하며, 현지 노동자들을 일본의 경영관례대로 관리하는 사례도 있음. 그러나 대체로 일본기업은 기타 국가 기업에 비해 경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지 않음.

질문 2: 중-일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이며, 중-일 FTA에 대해 중국 고위층에서 제안한 적이 있는가?

답변 2:

중-일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자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기본입장은 중-일 FTA의 구축을 통해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임.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간에 FTA협상을 위한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음.

또한 구체적인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1, 2년 전에 중국 상무부 고후청(高虎城) 부부장이 일본 방문시 이를 제안한 적이 있음.

질문 3: 일본의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승인 전망은?

답변 3:

일본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기간이 짧다는 점과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시장경제지위 승인을 거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승인문제는 당분간 지켜보아야 할 것임. 또한 이 문제에 있어 일본은 미국의 입장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여부가 관건이라고 판단됨.

질문 4: 중국정부가 산업고도화를 표방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자본재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이로 인한 중-일 교역구조의 변화는?

답변 4:

과거 중국의 대일 수입품 가운데 최종재 수입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중국경제 고도 발전과정 중 기업수요 증가로 인해 중간재의 수입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일본의 대중 투자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이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중-일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과거 중국의 대일 수출 주요품목은 석유, 석탄 등 광물제품이었으나 최근에는 기계제품, 전자제품 등의 수출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 이는 중국내 일본투자 기업이 일본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최종재를 다시 일본에 재수출하는 것과 관련이 깊음. 이에 따라 일본의 대중 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일본의 중간재 대중 수출규모도 커 질 것임.

질문 5: 2006년 말 중국정부가 발표한 가공무역 금지 정책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답변 5:

가공무역은 중국이 외자를 유치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최근 일부 가공무역에서 환경오염, 노동력의 노동집약 산업편중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중국정부는 가공무역 자체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기술축적이 높고 환경보호 정책에 부합되는 가공무역에 대해 제한하지 않을 것임.